

원자력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고장과 사고의 은폐, 수명이 끝난 부품의 불법 재활용 등의 악재가 결국 안전과 직결된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이어졌다. 원전 3기가 멈춰서면서 악화된 전력난으로 원자력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끝없이 터져 나오는 원전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된 '원전 마피아'에 대한 눈길이 끊지 않다.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국가의 경제 부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 있던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몹시 난처하다.

원자력계에 대한 싸늘한 시선

원자력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원전을 멈춰 세운 원전 비리가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대통령의 지적도 있었고, '천인공노할 일'이라는 국무총리의 따끔한 발언도 있었다. 원전 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원전 마피아'에게 돌아가고 있다. 원전 마피아에 대한 언론 보도가 1천 건을 넘어섰고, 구글에서는 78만 건의 문서가 검색된다. 대부분이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묻는 부정적인 내용이다. 흔히 서울대, 한양대, KAIST를 정점으로 하는 6개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 출신이 원전 마피아로 지목되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중견 언론인마저 '그놈의 원전 마피아 때문에...'로 시작되는 칼럼을 통해 전문성을 앞세운 비밀주의와 엘리트주의, 그리고 공연한 애국주의로 무장을 하고 끈끈한 학맥으로 똘똘 뭉친 폐쇄적인 원전 마피아의 신화가 무너지게 된 이유를 신랄하게 파헤쳤다. 내부 고발에 의해 추한 모습을 드러낸 원자력 비리가 역대 대통령들의 무한신

뢰 속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던 원자력계가 원전이라는 눈앞의 이익을 두고 분열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원자력계의 '순혈주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실제로 원전 전문가들의 재취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도 시행이 될 모양이다. 원전 실무자들에 대한 대응은 더욱 가혹하다. 이번 비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쫓겨나고, 한수원과 한전기술의 임원과 간부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강요당했다. 정치인이나 고위직 관료들의 엄청난 떡값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서 면죄부를 주는 정부가 기술직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성이나 책임 여부조차 따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정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글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본지 편집인
duckhwan@sogang.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교수, 대한화학회 탄소문화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원자력계의 응색한 변명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 이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확실한 전문가적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하던 원자력계의 입장이 몹시 당혹스럽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형국이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원자력계의 핵심 인사가 과학기술계 전체를 대변해주는 인수위원으로 활약하던 일이 엇그제였는데 말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실현시켰고, 아무 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원전을 당당한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킨 기적과도 같은 공로가 한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정작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 원전 정책과 원전의 운영을 좌지우지해왔던 일부 기술 관료와 그런 기술 관료들과 밀착했던 일부 전문가와 기술자,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목소리에 정신을 빼앗겼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전력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런 주장은 설득력을 기대할 수 없는 응색하고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전력난을 초래한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지금까지 비리를 방치해왔던 '몸통'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산업부의 직무유기가 진짜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체도 불확실한 원전 마피아 탓으로 돌리기에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오히려 원전 운영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고 봐야만 한다. 우선 원자력 산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심각한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다. 산업부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만들지 못했던 책임도 엄중하다. 국제적 압력 때문에 뒤늦게 만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직도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산업부가 원안위를 무시하고 월권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뿌리까지 썩어버린 원자력계의 도덕적 해이는 산업부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관리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산업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원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2001년의 '전력산업구조 개편',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됐던 '연료소비현대화 계획', 그리고 2011년 이후의 황당한 '기름값대책'이 모두 엉터리였다. 모두가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쟁'만을 강조한 결과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등장한 6개 지역별 화력발전사들의 진짜 경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연료 소비를 현대화하겠다는 노력은 공연히 전력 소비만 부추기고 말았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정말 '묘한' 발언으로 시작된 알뜰주유소와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는 국회가 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일본 정유사만 도와주는 매국적 정책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책임

많이 늦었지만 과학기술계가 나서야 한다. 원자력계의 폐쇄적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은 원자력 전문가만의 영역일 수가 없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감시와 견제에는 과학기술계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도 원전 부품의 시험을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올림픽을 계기로 체육 선수들의 약물 복용 여부를 가려내는 도핑 시험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원전 부품의 성능 시험이 도핑 시험 기술보다 더 어려울 이유가 없다. 과학기술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모르는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형편이다. 과학기술계가 엉터리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민주화된 과학기술 사회에서 과학자의 책임은 과학기술의 개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과학자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다. **ST**